

---

# 2018년 주요업무계획

-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한 국민 삶의 질 향상 -

---

2018. 1.





2018년, 내 삶을 풍요롭게 하는  
숲을 만들겠습니다!

나무가 자라면서  
온실가스를 흡수해요

CO2 흡수량  
4,851만t

산림재해,  
지능화 시스템으로  
스스로 지켜요

인명피해  
0명

쾌적하고 활력 넘치는  
산촌에서 살고있어요!

산촌 거점권역  
0 ▶ 5개

산림에서 스트레스를  
날리고 재충전해요

산림복지서비스 수혜자  
2,060만 ▶ 2,310만명

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 
도시숲이 늘어나요!

1인당 도시숲 면적  
9.9 ▶ 10.9㎡

산림에서 돈도 벌고  
일자리도 나와요

일자리 창출  
19천개

우리 임산물이  
세계로 수출되요

임산물 수출액  
4.4억 ▶ 5억\$





## 목 차



I. 2017년 성과와 평가 .....	1
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 .....	7
III. 2018년 업무추진 방향 .....	11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 .....	15
1. 주요정책	
①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 .....	18
②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 .....	22
③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 .....	25
④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 .....	28
⑤ 국제 산림협력 증진 .....	31
⑥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 .....	34
2. 당면현안	
① 산불 방지 대책 .....	36
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.....	38
V. 공통과제 추진계획 .....	39
1. 소득주도 성장, 혁신성장 정책 .....	41
2. 3만불 시대 원년, 정책전환 과제 .....	42
3. 갈등과제 및 사회적 대화(타협) 과제 .....	43
4. 국민 안전·안심 정책 및 과제 .....	44
5. 근무혁신 추진계획 .....	45



---

## I. 2017년 성과와 평가

---





# I. 2017년 성과와 평가

## 1

## 성 과

### □ (정책방향) 사람중심의 산림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

- 개청 50주년 산림미래비전\*을 선포(10.18)하고 제6차 산림기본계획 수립
  - \* 일자리가 나오는 경제산림, 모두가 누리는 복지산림, 산림과 자연의 생태산림
- 소득주도성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일자리 중심 행정기반 마련
  - \* 산림일자리창업팀 신설('17.8) 및 산림일자리 종합대책 수립('17.10)

### □ (산림육성) 산림사업 운영체계 개선 및 제도기반 마련

- 산림기술진흥법 제정('17.11)으로 산림사업 품질제고 기반 마련
  - \* 산림기술자 경력관리, 산림기술용역업 등록관리, 산림사업 안전관리 강화 등
- 산림용 종·묘 고시 확대 및 조림 단비 현실화 등 산림사업 운영 개선
  - \* 산림용 종자·묘목 : (종전) 23종 → (개선) 68종 (황칠·헛개 등 특용자원 추가)

### □ (목재산업) 국산목재 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

- 공공기관 국산목재 우선구매를 위한 목재이용법 개정('17.11)
  - \* (종전) 국산목재 우선구매 권고 → (개선) 국산목재 우선구매 의무
- 산업부 주관 국정과제에 '산림바이오에너지 REC 가중치 상향' 반영
  - '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의 이용·보급 촉진에 관한 규정' 고시(12월)
  - \*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REC 가중치 상향(1.5→2.0)에 맞춰 범위·증명절차 등 규정

### □ (산림복지) 민간주도 산림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신 시장 창출

- 체계적인 산림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제1차 산림복지진흥계획 수립
  - \* 산림휴양, 교육, 치유 등의 개별 정책을 통합하는 비전 및 추진전략 마련
- 산림교육·치유전문가 양성·지원방식 변경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
  - \* 숲해설가 등 민간위탁(전문업) 전환으로 민간시장 활성화(687명)

## □ (그린인프라) 산촌과 도시 등 공간중심의 산림정책 강화

- 지역 발전의 거점공간으로서 산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환기
  - \* 산촌 거점권역 육성방안 수립('17.9), 균형발전박람회 컨퍼런스 개최('17.11)
- 국민 참여형 도시녹화운동 등 도시숲 다양화 및 만족도 제고
  - \* 동아일보 주관 '2017 대한민국 정책평가'에서 3.65점으로 전체 정책 중 4위 선정

## □ (생물다양성) 수목원 네트워크 기반 구축 및 국제적 역량 확대

- 국립 법인수목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한국수목원관리원 설립('17.5)
  - \* 한국수목원관리원 현황 : (정원) 175명, (조직) 5부·13실·31팀, ('17예산) 160억원
- IUCN Red-List 등재 등 산림생물다양성 국제적 활동기반 강화
  - \* '17년 매미꽃, 매자나무, 할미밀망, 해변싸리 등 10종 추가 등록

## □ (산림재해) 3대 산림재해(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) 대응체계 강화

- 산사태 주관기관으로서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 정비
  - \* 산사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및 산사태대응 평가단 구성 운영 규정 제정
- 재난성 대형산불에 대비한 대형헬기 도입 등 산불대응체계 강화
  - \* 대형·재난성 산불 대응방안 수립 및 대형헬기 2대 계약 체결('17년 추경)
-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 방제(99만본) 및 선단지 선제적 방제
  - \* 피해고사목 발생 : ('15.4) 174 → ('16.4) 137만본(△21%) → ('17.4) 99만본(△27%)

## □ (국제협력) 산림분야 국제회의 개최로 산림외교 리더십 확인

- APEC 산림장관회의('17.10) 개최로 국제산림협력 논의를 주도
  - \* 산림확대 등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'서울선언문' 채택
- 제2회 아-태지역 도시숲회의(APUFM) 성공적 개최('17.9)
  - \* 17개국 180여명 참가, 국가간 협력방안인 '서울액션플랜' 채택

## □ 재난성 대형산불 발생시 재난정보 전파 및 유관기관 공조체계 미흡

- 산불재난 문자발송 기준 및 발송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선 초래
- 강풍시 진화 가능한 대형헬기와 전문 지상진화인력 부족으로 초동대응 한계 및 소방·군 등 유관기관의 일사불란한 지휘·공조체계 미흡

\* 강릉·삼척 산불진화에 4일간 총 헬기 143대, 인력 35,841명 투입

☞ 대형산불에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진화 역량 강화

## □ 열악한 임업경영 여건 및 여전히 낮은 임업인의 소득 수준

- 농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재해보험, 직불금 등 소득안전망 미흡

\* 임가소득('16년, 3,359천만원) : 농가대비 90%, 어가대비 71%

☞ 산림경영 활성화를 통한 임업소득 증진 및 재해보험 등 안전망 지원

## □ 다양한 국민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산림복지단지 확보에 한계

- 관 주도의 국·공립 산림복지단지 조성 추진으로 예산확보에 제한

\* 「산림복지법」 제32조(사업시행자) : 국가, 지자체, 복지진흥원, 공무원연금공단, 한국토지주택공사, 근로복지공단, 지방공사, 공익법인

☞ 사회적기업 등 민간참여 조성 및 서비스 제공 기회 확대 필요

## □ 몽골 사막화방지 민간조림지에 대한 적극적 관리 부족

- 민간 조림지 4천ha의 효율적 사후관리가 부족하여 조림목 고사 등 발생

\* 자치단체, 민간 조림 주체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설정, 사후점검을 통한 권고 추진

☞ 정부간 협력을 넘어 지자체 및 민간의 사후점검 역할 강화가 필요



---

## Ⅱ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---



## II. 2018년 업무추진 여건

- (일자리) 저성장시대에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적극적 일자리 창출 필요
  - 산림은 임산물 생산, 휴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일자리 소재 보유
    - \* 나무의사, 가드너, 산림탄소 검증인력, 목공전문가, 산림치유지도사 등
  - 산림을 활용한 사회적기업 등에서 은퇴자,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가능
  
- (4차혁명) 산림에서도 BT·ICT 등 신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출현
  - 산림은 드론, 위성 등 첨단기술의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야
    - \*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시 드론을 활용하여 1인당 조사 가능 면적이 10배로 증가
  - 산림산업을 노동집약형에서 기술집약형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활용
  
- (삶의 질) 소득 3만불 시대에 맞는 선진국형 주거·복지 수요 증가
  - 좋은 먹거리, 쾌적한 주거공간 등 삶의 질을 추구하는 소비 증가
    - \*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인증 필요 의견이 83% (2015, 청정숲푸드 소비자 설문)
  - 산림을 활용한 휴양활동이 등산, 캠핑, 레포츠, 치유 등으로 다변화
  
- (안전) 이상기후로 산림재해(산불, 산사태, 산림병해충) 발생 가능성 증가
  - 폭우, 가뭄 등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와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
    - \* 산사태 발생추이(연평균) : ('80년대) 231 → ('90년대) 349 → ('00년대) 713ha
  
- (기후변화) 온실가스 감축의무 발생 및 기업활동 위축 우려 증대
  - 파리협약 발효('16.11)에 따라 2030년까지 감축의무(3.1억tCO<sub>2</sub>) 이행 요구
    - 산림은 유일한 탄소흡수원으로 기업부담 완화를 위한 역할 기대
    - \* (일본) 목재활용·산림경영으로 총 배출량의 2.6% 감축, (중국) '05 수준 임목 축적 증대
  - 기후변화 취약수종이 쇠퇴하고 있어 산림생물종의 체계적 보전 필요
    - \* 세계적으로 매년 약 2만종이 멸종, 육상생물자원의 92%가 산림에 서식





---

### Ⅲ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---



### Ⅲ. 2018년 업무추진 방향

#### 1

#### 기본방향

-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여 산림자원 가치제고, 임업인 소득 증진, 산림산업 활성화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
- 산림을 서민들을 위한 여가·휴식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

#### □ (순환경제) 산림자원을 활용한 자원순환 경제와 혁신성장 실현

- 산림자원의 조성·육성·이용이 균형을 이루는 선순환 경제체제 구축
- 목재, 청정임산물, 산림휴양 등 다양한 산림가치를 국가경제에 적극 활용
- 임업인 소득안전망 확충 및 경영지원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확대

#### □ (산림복지) 산림을 서민들의 편안한 여가·휴식공간으로 적극 활용

-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체계 확산으로 국민복지 증진에 기여
- 산림복지전문업 활성화 및 민간주도 발전으로 새로운 일자리 확대

#### □ (녹색공간) 숲에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을 창출

- 산촌 거점권역을 지정·육성하여 산촌을 지역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육성
-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국민과 함께 추진하는 그린인프라 구축

#### □ (산림보호) 산불·산사태·산림병해충 피해 최소화 및 생태계 보전 강화

- 산림재해 대응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강화
- 산림보호 강화와 훼손 생태계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 증진

#### □ (국제협력)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 등 국제사회 기여 확대

- 북한 황폐산림 복구 등 산림분야를 관계개선의 마중물로 활용

## 2

## 연말 이루고자 하는 모습

-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성공모델 발굴 및 확산
  -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: 19천개
  - 산촌거점권역 육성 : 5개소
- 숲에서 일하고, 여가를 즐기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
  - 1인당 도시숲 면적(m<sup>2</sup>) : ('15) 9.9 → ('18) 10.9
  - 산림복지수혜자 확대 : ('17) 2,060만명 → ('18) 2,310만명
- 산불, 산사태 등 산림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
  - 평창 동계 올림픽 기간 중 철저한 대응으로 산불피해 최소화
  -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제로화 및 재선충병 확산 방지

### <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>

- ◇ 기존의 산림자원 육성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, 산림자원을 순환·이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·사회적 부가가치를 창출
  - 국민과 임업인의 행복 증진을 위해 산림인력의 역량강화, 좋은 일자리 창출, 국민참여 확대 등 사람에 대한 투자를 확대



---

## 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---



## IV. 주요업무 추진계획

1

### 주요정책

#### 비전

일자리가 나오는 **경제산림**, 모두가 누리는 **복지산림**,  
사람과 자연의 **생태산림**

#### 목표

산림을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의 **핵심자원**으로 재창조

### 중점과제

#### 1.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

경제림 육성 / 목재·임산물산업 경쟁력 강화 / 산림탄소경영 / 일자리 창출

#### 2.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

산림휴양·레포츠·등산 / 산림교육·치유 /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강화

#### 3.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

산촌 거점권역 육성 / 도시 내 그린인프라 확충 / 산지관리 패러다임 전환

#### 4.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

산불·산사태·병해충 대응 / 산림생태계 보호·관리 / 생물다양성 보전

#### 5. 국제 산림협력 증진

AFoCO 등 다자협력 / 사막화방지 / 해외조림 / 북한산림복구

#### 6.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

일자리 지원 / 불필요한 일버리기 / 교육혁신 / 소통강화 / R&D 실효성 제고

## 1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축

### 1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육성·공급

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량 목재 등 임산물을 지속적으로 생산·이용하기 위해 경제림을 중심으로 육성·관리 강화

\* 산림자원 육성체계 : 양묘(5천만본) → 조림(2만ha) → 숲가꾸기(21만ha) → 원목생산(567만m<sup>3</sup>)

◇ 국산 목재 생산량 확대 : ('17) 541 → ('18) 567만m<sup>3</sup>

#### □ (자원육성) 지역별, 기능별 특성을 고려한 조림·숲가꾸기 실시

○ 우량 종자, 묘목 공급을 위한 채종원 및 스마트 양묘시스템 확대

\* 양묘시설 현대화사업 : 국유 2개소, 민유 5개소(강릉, 공주, 익산 등)

○ 경제림 육성단지를 중심으로 목재생산을 위한 산림사업 집중

\* 경제림 육성단지 산림사업 집중률 : ('17) 69% → ('18) 70%

○ 공익림은 숲의 기능별 특성에 맞는 생태적 숲가꾸기 추진

\* 경관관리, 수원함양 등 숲의 기능에 따라 전문화된 숲 관리기술 적용

#### □ (목재생산) 다 자란 나무를 벌채하여 목재산업계 원료로 공급

○ 원목생산 및 공급을 확대하고 국산 목재의 이력 관리를 시행

\* '목재자원관리시스템' 운영을 위한 「목재이용법 시행규칙」 개정

○ 임도, 임업기계 등 목재생산 및 산림경영 기반시설 확대

\* 경제림 육성단지 임도 확대(m/ha) : ('17) 4.8 → ('18) 5.3

\* 임도효과 : 원목생산면적 40ha 확대(1km 조성시), 원목생산비용 30% 절감(10m/ha 기준)

#### □ (선도산림단지) 단지별 특화자원 조성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

○ 제재소, 가공공장 등 지역산업과 연계하여 선순환 구조 마련

\* 강원 흥천(жат공장), 충남 흥성(광성제재소), 경남 산청(펠릿·톱밥공장) 등



## &lt;정책방향 및 목표&gt;

◇ 산림에서 생산된 목재제품과 임산물의 산업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여서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을 유도

\* 목재생산업 현황('15) : 23,441개 업체, 16만명

◇ 산림산업 생산규모(추정) : ('17) 48조원 → ('18) 50조원

### □ (목재산업) 기술개발과 품질혁신을 통한 목재산업 경쟁력 제고

○ 지역별 특화된 목재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국산목재 공급기반 구축

\* 목재산업단지 조성 1년차 사업 추진(1개소) 및 지속적 예산 확보

○ 유해물질 차단과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강화

\* 관세청 협업조사 강화 및 계도위주에서 단속위주로 전환

○ 목조주택 건축 시 용자 지원 및 목조건축 관련 규제개선을 위한 협의

\* 목조주택 건축비용 용자 지원(최대 1억원) 및 표준모델 개발·보급

\* 규모제한, 내화·차음기준, 전문업종 신설 등 건축법, 주택법 관련 국토부 협의

### □ (청정임산물) 임산물의 생산·가공·유통 체계화 및 수출 지원

○ 현장중심 문제 해결을 통해 표고버섯 등 대표품목 산업 활성화

\* 원산지 표시 개선, 정책-R&D-현장 통합 문제 해결모델 마련 등 지원 확대

○ 온·오프라인 유통망을 확충하여 소비자 접근성·구매편의성 제고

\*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생산자·소비자 정보 지원 확대

○ 수출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운영 확대

\* 수출 관련 정부지원 사업 소개 및 바이어 연결, 수출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 등

### □ (석재산업) 산림훼손과 안전사고를 최소화하고 산업 발전을 지원

○ 「석재산업진흥법」을 제정하여 석재산업의 지원·관리 근거 마련

\* 석재산업의 규모화·집약화, 전문기술인력양성, 지원 대상·조건·절차 등

## &lt;정책방향 및 목표&gt;

- ◇ 신기후체제에 대응한 저탄소 경제 실현을 위해 산림의 탄소흡수를 늘리고 버려지는 목재 바이오매스를 신재생에너지로 활용
  - \* 파리협약은 산림을 활용한 온실가스 흡수·저장원 보전·증진 활동을 촉구
- ◇ 산림에서 온실가스 국가감축 목표에 기여하기 위한 기반 구축

## □ (산림탄소) 탄소 중심의 산림경영 강화 및 산림탄소거래 활성화

-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산림탄소 활용 기반 구축
  - \* 스마트 산림탄소 관리체계 및 산림부문 흡수량 조기산정 방안 마련
- 산림탄소 거래 기반 구축 및 산림탄소 상쇄제도 활성화 추진
  - \* 배출권시장 외부 사업에서 산림탄소흡수량 이용 방안 마련
- 국제 탄소시장과 연계하여 REDD+사업을 탄소배출권 사업으로 확대
  - \* REDD+ : 개도국의 산림전용·황폐화 방지를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메커니즘
  - \* 우리나라는 4개국(인니, 캄보디아, 미얀마, 라오스)에서 REDD+사업 추진

## □ (산림인증) 한국형 산림인증제도 국제화 등 지속가능경영 기반 강화

- 국제산림인증 연합프로그램(PEFC) 상호인정 수검 및 취득
- 산림인증 활성화 방안 마련 및 확산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
- 한국산림인증제도 홍보를 강화하여 산림인증 제품 소비 확대

## □ (바이오에너지) 버려지는 목재를 활용한 탄소중립사회 실현

- 발전소의 국산 산림바이오에너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
  - \*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REC 가중치 상향을 위한 고시 개정(산업부)
- 목조건축 및 목재이용 활성화를 통한 도시 탄소저장 기능 확대
  - \* 목조건축 규제개선을 통한 목재이용 확대 및 지역 환경 개선

## 4

## 순환경제를 연결하는 일자리 만들기

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- ◇ 산림자원 순환경제를 구축하는 매개체로서 일자리를 지원하여 연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선순환 구축
- ◇ 신규 장기 일자리 창출(누계) : ('17) 1.5천개 → ('18) 3.5천개 (순증 2천개)  
\* 귀산촌 창업, 산림형 사회적경제, 산림복지전문업, 수목진료 전문인력 등

### □ (사회적경제) 산림일자리발전소로 산림형 사회적경제 진출분야 확대

- 사회적경제 육성과 창업활동을 현장 밀착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신설  
\* 지역자원 조사·진단, 인재양성, 사업발굴·육성 등 사람중심 지원 체계
- 지역 기반 산림비즈니스 모델 개발·보급으로 창업영역 확대  
\* 지역주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주체 육성, 자생력 향상 및 네트워크 구축
-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수립·추진으로 지속성장 도모  
\* 사회적경제를 선도하는 신규 프로젝트 개발, 기존 산림인프라 활용방안 등

### □ (전문일자리) 청년을 위한 산림분야 신규 전문일자리 제공

- 나무의사제도 시행('18.6)을 위한 하위법령 제정 및 전문인력 양성  
\* 나무의사 : 나무의 병충해를 예방하고 진단·치료하는 전문인력
- 산림기술자의 교육 및 자격·경력 관리를 강화하여 전문성 향상  
\* 산림기술자 양성·관리, 교육훈련 의무화 등 산림기술진흥법 하위법령 제정('18.11)

### □ (일자리 질 개선) 전문성 향상과 작업환경 개선으로 만족도 제고

- 산림기술자 등 산림분야 취업자 보수교육 강화, 교육훈련 지원  
\* 취업 취약계층은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 등 민간일자리 이동 지원책 강화
- 고용환경 실태조사·분석을 토대로 산림일자리 질 제고방안 마련
- 사업별 품셈 개선 등 전문성과 노동여건을 고려한 임금 현실화

## ② 숲을 국민의 쉼터로 재창조

### 1 숲에서 즐기고 누리는 삶 확산

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숲을 다양한 체험활동과 여가를 즐기는 문화공간으로 육성함으로써 서민들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

\* 1년에 1회 이상 산행인구는 국민의 77%인 32백만명으로 조사('15, 산림청)

◇ 숲길조성·정비 : ('17) 15,270km → ('22) 22,270km

산림레포츠 활동인구 : ('17) 390천명 → ('22) 500천명

#### □ (산림휴양) 자연휴양림의 산림관광 및 지역상생 역할 강화

○ 산림복지 향상 및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자연휴양림 확충

\* '21년까지 국립 4개, 공립 19개 신규 추가조성(총 166→189개)

○ 자연휴양림별 산촌마을 협의체 구성으로 상생·협력 강화

\* 휴양림관리소 지역팀(4)에서 주민대표 간담회, 지역사업 발굴 등 주도적 역할

○ 획일적인 휴양림 조성·운영방식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수요 대응

\* 레포츠(암벽·트리탑, 산악자전거), 문화예술공간(버스킹 공연) 등 특성화

#### □ (숲길·등산) 국가숲길 지정·관리 기반 구축 및 산행문화 개선

○ 국가 숲길 지정·관리제도 도입을 위한 법적기반 마련 및 시범 운영

\* 예약탐방제 및 휴식년제 실시 등 체계적인 숲길 관리·운영 체계 구축

○ 관계부처·산악단체 및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력체계 구축

\*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행문화 개선을 위한 민·관 거버넌스 활동 강화

○ 등산로 DB 확대·개방으로 산업화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

#### □ (산림문화) 산림을 다양하게 즐기는 국민의 문화 공감대를 형성

○ 국가 산림문화자산 지정 및 전통 보전을 위한 산림문화전집 발간

\* 산림문화전집: ('16) 미술, 마을숲 → ('17) 산업, 정원 → ('18) 음악, 문화

○ 지역 특화 산림레포츠시설 조성 및 대회 개최(청장배 5회)로 저변 확대

## 2

## 국민이 힐링하는 산림서비스 제공

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- ◇ 수요자 맞춤형 산림교육,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이 산림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활력을 재충전
  - \* 산림교육·치유전문가의 안정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
- ◇ 맞춤형 프로그램 수혜인원 : ('17) 398만명 → ('18) 430만명

### □ (산림교육) 창의성·인성발달을 위한 산림교육 서비스 제공

- 누리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특화 유치원 조성을 위한 지자체 협력
  - \* 행복청, 세종시교육청 협력을 통해 산림교육 특화 유치원 2개 조성(~'19)
- 자유학년제 확대에 따른 청소년 대상의 차별화된 숲 교육 추진
  - \* 산림일자리 체험 프로그램 확대, 정규교과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
- 서비스 제공방식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여 고용환경 개선
  - \* 전문업을 통한 산림교육·치유전문가 고용규모 : ('17) 687명 → ('18) 1,196명

### □ (산림치유) 맞춤형 서비스 개발·제공으로 산림치유의 수준을 격상

- 도시인근 숲에서 태아·산모 숲 태교 프로그램 확대 운영(2천→3천명)
- 대상·증상별 산림치유 프로그램 및 매뉴얼 개발로 서비스 다양화
  - \*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산림치유 프로그램 개발 등
- 공공기관 협업 및 치매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와의 연계 강화
  - \* 지역보건소 치매예방 시범사업 추진 및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연계

### □ (수목장림) 친환경 장묘문화를 확산을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

- 공공형 수목장림 활성화를 위한 관련법령 개정 및 신규조성 지원
  - \* 수목장림 조성 주체 확대 등 장사법 개정을 위한 복지부 협의 추진
- 국유림내 묘지 수목장림 이장 및 산림복원 시범사업(100기) 추진
  - \* 무연고 묘지→봉안시설 안치, 유연고 묘지→수목장림 안치

### 3

##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강화

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국민들이 누리는 산림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증진하기 위해서  
산림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민간 시장 활성화를 유도

\* 산림복지시설 : 유아숲체험원, 산림교육센터, 자연휴양림, 치유의숲 등

◇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발급 : ('17) 15천매 → ('18) 25천매

### □ (인프라) 랜드마크 시설 조성 추진 및 산림복지단지 시범 모델 제시

○ 지덕권산림치유원 및 노령산맥 휴양·치유벨트 조성('18~'22) 추진

\* 지덕권(827억원), 노령산맥(200억원) 공사수행방식 결정 및 기본계획 수립 등

○ 산림복지단지의 차별화된 개념 정립 및 단지 조성 절차 합리화

\* (기존시설) 숙박·휴양·치유·여가 기능 ⇒ (단지) 기존 기능+장기체류·거주 기능

\* 3단계의 조성절차를 2단계로 간소화, 개별시설 타당성조사 일원화 등 법령 개정

### □ (민간화)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지원을 통한 민간 시장 활성화 유도

○ 민간중심의 전달체계 구축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전문화, 산업화

\* 전문업 위탁사업의 범위 : ('17) 숲해설 → ('18) 산림치유, 유아숲교육 확대

○ 숲해설·산림교육 등 산림복지전문업 창업자를 위한 교육·훈련 확대

\* 산림복지진흥원을 통한 원스톱,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운영

○ 규제개선을 통한 민간의 진입장벽 완화(유아숲체험원 면적기준 등)

### □ (대상확대) 산림을 접하기 어려운 소외계층에 체험기회 제공

○ 소외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발급 물량과 수혜 범위를 확대

\* 이용권 발급(매) : ('16) 9,100 → ('17) 15,000 → ('18) 25,000

\* 차상위 계층, 장애인 연금수급자를 포함하기 위한 산림복지법 시행령 개정 추진

○ 다문화가정을 위한 맞춤형 산림복지 시설 및 서비스 확대

\* 아세안 산림휴양단지 등 특색시설 확대 및 다국어 숲해설 서비스 제공 등

### ③ 사람중심의 녹색공간 조성

#### 1 산촌 거점권역 육성

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산촌거점권역을 지역발전의 핵심공간으로 육성하여 새로운 산촌의 모습을 제시하고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재생

\* 산촌현황 : 109개 시·군 5,116개 (임야율 70%이상, 경지율 19.7% 이하 등)

◇ 산촌거점권역 선정·육성 : ('17) 0개소 → ('18) 5개소

#### □ (제도화) 산촌거점권역 선정·육성을 위한 법·제도적 기반 마련

○ 산촌거점권역 중심의 산림예산 집중 지원 및 산촌특구제도 신설

\* 산촌거점권역·산촌특구에 대한 정의 및 우선지원을 위한 「임업진흥법」 개정 추진

○ 지역특화자원을 발굴·목록화하고 거점권역 시범사업 대상지(5개소) 선정

\* 인제 자작나무숲, 양평 치유의숲 등 국유림·국유시설과 연계한 시범사업 추진

○ 현장 사업의 실행 및 지원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구축·활용

\* 인근 대학과 연계한 '산촌 큐레이터' 제도 도입 및 주민 교육프로그램 강화

#### □ (협력체계) 산촌거점권역 중심의 국가-지자체 상생 협력체 구축

○ 산촌 현장 이행을 위한 협의체 구성을 통해 협력거버넌스 구축

\* (중앙단위) 산촌 활성화 지원센터 신설, (현장단위) 산촌 리더 그룹 배치

○ 각계 전문가로 '산촌혁신포럼'을 구성하여 산촌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

\* 언론·문화·학계 등 다양한 주체가 미래에서 원하는 매력적인 산촌을 제시

#### □ (귀산촌) 맞춤형 정보제공과 컨설팅으로 정착 실패 최소화

○ 귀산촌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정책자금 지원 확대

\* 귀산촌 중개 센터 → 산촌 미리 살아가기 캠프 운영 → 정착자금 지원

○ 귀산촌을 준비하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상시 제공

\* 귀산촌 희망지에 대한 주택, 임지 등 주변여건 통합 정보서비스 제공

## 2

## 도시 내 그린인프라 구축

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- ◇ 생활권 그린인프라를 확대하여 미세먼지 등 도시 내 환경문제를 저감하고 산림복지공간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
  - \* 1인당 도시숲 면적(m<sup>2</sup>) : 한국 9.9, 런던 27, 뉴욕 23, 파리 13, 도쿄 11
- ◇ 시민이 주도하는 도시숲 조성 확대 : ('17) 161ha → ('18) 175ha

### □ (도시숲) 미세먼지 저감 등 도시숲 수요에 부응하는 도시숲 확대

- 도시재생사업, 산업단지 환경개선 등과 연계하여 도심에 숲을 조성
  - \* 도시재생사업 시 도시숲 조성 의무화 및 완충녹지 조성 등을 위한 국토부 협의
- 도시숲을 유아숲체험, 숲해설 등 산림복지 공간으로 활용
  - \* 도시 외 산림까지 접근이 어려운 유아 등을 대상으로 도시숲에서 복지서비스 제공
- 가로수를 활용한 지역 랜드마크 창출 및 관광 상품 개발 지원
  - \* 주요 도시별로 지역 특색을 반영한 명품 가로수길 조성 및 홍보

### □ (정원) 인프라를 확충하고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산업화 촉진

- 코리아 가든쇼, 정원산업디자인전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
  - \* 가든쇼(광화문광장, 5월)/ 디자인전(순천, 5월)/ 오픈 가든 어워드(7월 시상)
- 생활속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'찾아가는 정원 만들기' 추진
  - \* BH 시민사회수석 주관 도시재생을 위한 '공동체 정원' 만들기 봄 업
- 정원인프라 구축을 위한 지방정원 조성(신규 6) 및 민간정원 등록 추진

### □ (시민참여) 도시숲 트러스트를 활성화하여 등 민간 참여 확대

- 도시녹화운동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강화 및 홍보 추진
  - \* 지자체별로 '도시숲 트러스트'를 구성하여 도시녹화운동 참여 활성화
- 기업·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자발적 참여 극대화
  - \* 참여기업에게 세제혜택, 산림탄소 크레딧 발급 등 인센티브 다양화



### 3

## 산지관리의 패러다임 전환

### <정책개요 및 목표>

◇ 산림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위해 산지의 적정 수준을 평가하고 생태적 산지이용 방안을 도입하고 확산

\* 산지이용구분 현황 : 보전산지 4,929천ha, 준보전산지 1,456천ha

◇ 보전과 이용의 조화를 이루는 산지보전 메커니즘 마련

#### □ (산지체계) 이용과 보전이 조화를 이루는 합리적 산지관리 체계 재정비

○ 산지의 이용수요와 생태적 안전성을 고려한 적정 산지총량을 산정

\* 계량학적 연구, 시민사회·학계 등 의견수렴을 통한 적정산지 비율 도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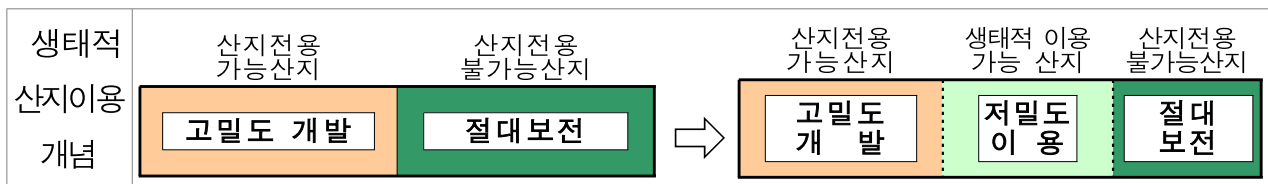
○ 산지이용 실태 및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 바탕으로 산지관리 체계 개선

\* ('15) 시범사업 → ('16~'17) 산지구분타당성 조사 → ('18) 산지구분도 작성·고시

#### □ (생태적이용) 보전과 개발의 이분법에서 벗어난 산지이용 패러다임 제시

○ 효율적 이용과 난개발 방지를 위한 '생태적 산지이용' 도입 추진

\* 산림재해 안정성 등 지형조건에 따른 산지전용 기준을 마련



○ 지역특성에 맞는 산지유역 유형별 산지관리

\* 산지유역 유형 : 도시형, 도시주변형, 주요산줄기형, 산악형

#### □ (국유림)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 개발 및 확산

○ 마을기업, 사회적기업 등에 국유림 지원으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

\* 국유림내 양어 임산물을 활용한 마을기업화 등 대상 마을 발굴(10개소)

○ 국유림을 지역과 연계한 생태관광·산림문화·힐링 자원화

\* 장성 편백숲, 인제 자작나무숲과 같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랜드마크 숲 확산

#### 4 산림재해 대응 및 생태계보전 강화

##### 1 선제적·통합적 산림재해 대응체계 구축

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산불·산사태·산림병해충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빅데이터, 드론 등 신기술을 적용하여 대응 전문성을 강화

\* 산림재해 현황('17) : 산불 1,479ha, 산사태 94ha, 산림병해충 피해 94천ha

◇ 산불·산사태 인명피해 제로화 및 소나무재선충병 전량방제 달성

##### □ (산불) 성공적인 산불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시화되는 산불에 적극 대응

○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비한 헬기 전진배치 등 특별 산불대책 추진

\* 동계올림픽벨트(평창, 강릉 등 5개 시·군 85천ha) 특별 예방·보호 추진

○ 대형산불 대응 강화를 위한 헬기 확대 및 무인항공기 적극 활용

\* '18 상반기 중형헬기(수리온) 1대, 하반기 초대형헬기(S-64) 1대 도입

##### □ (산사태) 취약지역 집중관리·과학적 예측기술 개발로 피해 최소화

○ 취약지역(24천개소) 점검·정비 강화 및 생활권 중심의 사방시설 확충

○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예측력 제고 기술 개발

\* 산사태 예·경보 고도화를 위한 산악기상관측망 확충 : ('17) 210 → ('18) 260개소

○ 땅밀림 전국조사·복구 및 산사태 위험지도 고도화 추진

\* 땅밀림 전국 조사('18~'23), 무인원격감시시스템구축·경계피난대책 마련

##### □ (병해충) 과학적 대응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 및 협업 방제 강화

○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방제(~4월) 및 과학적 예찰 강화

\* 피해목 발생추이 : ('15.4) 174 → ('16.4) 137 → ('17.4) 99 → ('18.4) 60만본 예상

○ 유관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주요 산림병해충별 맞춤형 집중 방제 실시

\* 농식품부, 농진청 등과 공동 예찰 및 방제로 방제 효과 극대화

## 2

## 산림의 체계적 보호·관리 강화

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백두대간, 산림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핵심구역을 중심으로 산림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·관리

\* 보호구역 현황 : 백두대간 275천ha, 산림유전자원 152천ha 등

◇ 불법 산림훼손지 정리 : ('17까지) 25천건 → ('18) 33천건

### □ (산림보호구역) 글로벌 기준에 맞는 보호구역 산림 관리체계 도입

○ 생물자원의 보고인 산림보호구역(44만5천ha)을 지속적으로 확대

\* 정맥·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유전자원보호구역 확대 : ('17) 152천 → ('22) 200천ha

○ 산림생태관리센터 확대 및 전문교육을 통한 보호구역 관리 강화

○ 타부처 소관 보호구역 내 산림의 목적에 따른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

\* 문화재보호구역(104천ha), 녹지보전지역(124천ha), 개발제한구역(249천ha) 등

### □ (산림복원) 백두대간과 DMZ 등 핵심 산림 생태축으로 관리

○ 백두대간, DMZ 등 핵심 산림의 훼손지를 친환경적으로 복원

\* 핵심생태축 복원사업(누계) : ('17) 314ha → ('18) 331ha

○ 민북지역의 산림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 및 산지관리종합계획 수립

\* 양구국유림관리소를 민북지역 국유림관리소로 개편 및 인력 재배치('18.1)

### □ (산림사범) 산림사범 담당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계도·단속

○ 전문적·체계적 사범업무 수행을 위한 '산림사범수사대' 기능 강화

\* 산림사범 전담인력 : ('17) 2 → ('18) 5명

○ 사범수사 전문성 배양 및 청원산림보호직원에 사범권 부여 추진

\* 사범권부여를 위해 법무부, 검찰청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

○ 산림범죄 시기별·유형별 예방·단속 및 기획·합동수사 실시

\* (봄) 산나물·산약초 → (여름) 휴양·야영 → (가을) 수실류·산행 → (겨울) 겨우살이·조경수

\* 유형별 : 인터넷 동호회 불법활동 및 임산물 불법판매, 불량목재제품 유통 등

## &lt;정책방향 및 목표&gt;

- ◇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산림내·외 생물다양성 보전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산림생물자원 관리를 통해 산업으로 연계 확대
  - \* 육상생물의 92%가 산림에 서식하며, 세계 생명산업 규모는 3,231억달러('14 기준)
- ◇ 산업화 중점 분야 : 식·약용, 기능성 식품, 정원·화훼 분야

## □ (생물다양성)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희귀·특산식물 등 보전 강화

-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유 고산 침엽수종의 보전·관리 강화
  - \* 1,000m 이상 고산지역 중 구상나무 등 침엽수종 분포지역 10만ha 조사('17~'18)
- 산림습원 관리를 위한 정밀조사 및 유전자원보호구역 신규지정
  - \* 강원·경북지역 75개소(41ha)의 산림습원을 대상으로 정밀조사 및 모니터링
- 야생화를 특화한 숲정원을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으로 활용

## □ (수목원)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산림생물자원의 체계적 수집·증식

- 국민들의 혼선 방지를 위해 '수목원'을 '식물원'으로 일원화 추진
  - \* 「수목원·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」 전면 개정 추진
- 수목원관리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정식개원
- 수목원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차질 없는 세종·새만금수목원 조성 추진
  - \* 세종수목원(~'20) 3년차 조성공사 추진 및 새만금수목원(~'26) 기본계획수립

## □ (생물산업) 나고야의정서 발효에 대응하여 산림생명자원 이용기반 구축

- 생명자원 소재발굴, 기능성 효과 분석, 신제품 개발 등 R&D 추진
  - \* 산림약용자원연구소를 중심으로 성분과 재배적지를 표시한 천연물지도 작성
- 나고야의정서 대응 기관별 역할·절차 마련 및 기업비용 부담완화 지원
  - \* 국내 유전자원의 지속적 확보 및 수입대체 자원 발굴, 설명회 등 홍보강화
- 산림생명산업 소재자원화 시범단지 추가조성(시범단지 3→6개소)

## 5 국제 산림협력 증진

### 1 국내외를 연결하는 국제산림협력 확대

#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◇ 국내 선진정책을 국제협력에 반영하여 국내외 공동발전을 모색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국제 이슈에 공동 대응

\* ODA 현황('17) : 138억, 다자성 8개/ 몽골, 카자흐스탄 등 5개국 양자 6개

◇ 국제사회의 산림분야 이슈를 주도하여 국익 실현에 기여

#### □ (정책확산) 에코투어리즘 등 국내 성공 정책의 해외 확산 적극 지원

○ 에코투어리즘 국제협력 모델을 제시·성공하여 국제적 관심 환기

\* 인도네시아 롬복섬 산림휴양 및 생태관광지 조성사업('15~'18) 추진완료

○ 학계, NGO 등 민간주도의 사업을 발굴·지원하고 해외관광객 유치

\* 해외문화홍보원, 한국관광공사 등을 활용한 국내외 산림관광 협력사업 홍보

#### □ (내실화) 해외 협력사업 대상지를 다변화하고 전문인력을 양성

○ 타부처 협력사업, 유·무상결합사업 등 융합사업을 적극 발굴

\* (베트남) 맹그로브숲 조성 사업으로 염해방지 및 쌀 생산 증진

○ ODA, R&D와 연계한 국제산림전문가 양성 및 전문가 협력 강화

\* 국제산림협력 특성화 대학원 지정제도 도입방안 마련 및 국제 전문가 교류 지원

#### □ (협력기반) AFoCO 설립 주도 및 세계산림총회('21)의 성공적 개최 준비

○ 산림분야 아시아 공동의 이익을 대표하는 논의체로서 AFoCO 설립

\* AFoCO(Asia Forest Cooperation) : 아시아산림협력기구

\* 브루나이 등 비준임박 국가를 접촉하여 5개국 기탁 완료(상반기) 및 총회 개최

○ 산림총회 준비기획단·운영협의회 등 추진체계 구성 및 예산 확보

\* 연차별 준비기획단 운영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

## 2

## 내실있는 해외산림자원개발 추진

### <정책방향 및 목표>

- ◇ 해외 산림자원을 개발하여 목재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하고 협력국과의 유대강화를 통해 산림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

\* 해외조림 및 목재반입 현황 : 455천ha, 생산목재 270만m<sup>3</sup> 반입

- ◇ 불법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으로 국내 목재산업 보호

### □ (해외자원) 시장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지원으로 투자 활성화 유도

- 민·관협력사업을 내실화하여 해외산림투자 모델 개발·보급

\* 동서발전-임업진흥원-인니영림공사 바이오매스 조림지 벌채(300ha), 가공 및 국내 반입

- 해외 산림 투자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금융 지원 확대

\* 보증보험 상품 개발 및 농식품 모태펀드 편입 등 펀드 운용 추진

### □ (투자기반) 산림협력센터를 중심으로 민·관 협력 네트워크 강화

- 해외투자 리스크 경감 및 현지지원 강화를 위한 산림협력센터 확대

\* 한-인니, 한-메콩강 센터 운영 및 파라과이 산림협력센터 설립('19) 준비

\* 해외산림자원개발, 투자지 법령·정보 수집 등 진출기업 지원

- 해외산림인턴, 시니어전문가 등 권역별 해외산림 전문인력 양성

- 양자협력국가별 협력 강화를 통해 기업애로 및 해외진출 지원

\* 15개 중점협력국(해외조림, 연구협력 등) 중심의 정례 산림협력위원회 운영

### □ (불법목재) 교역제한제도 도입으로 국제 목재무역 질서 확립에 기여

- 불법 벌채 목재 교역제한제도 운영고시 제정 및 중장기 로드맵 수립

\* 수입목재류의 신고 의무화 및 합법성 확인 검사제도 운영

\* (시범 운영) '18.10.1~'19.9.30, 7개 → (전면실시) '20년 이후, 15개 품목

- 수입목재 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목재합법성 표준가이드 개발

\* 세관장 확인품목 포함 및 전자통관시스템(UNI-PASS) 연계를 위한 관세청 협업

## &lt;정책방향 및 목표&gt;

◇ 북한 산림의 복구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남북 관계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신뢰관계 구축에 기여

\* 북한 황폐산림 현황 : 전체 899만ha 중 284만ha(32%) 황폐화

◇ 유관기관, 민간단체, 국제기구 등 연계를 통한 남북산림협력 강화

### □ (지원인프라) 북한 산림생태계를 복구하기 위한 지원태세 마련

○ 황폐산림 복구의 근간인 대북지원용 종자 채취·저장 확대

\* 대북지원 종자저장 : ('17) 30톤 (18천ha 복구) → ('18) 35톤 (21천ha 복구)

○ 북한과 기후조건이 유사한 지역에 대북용 양묘장 조성·운영

\* 강원 고성(3년차), 화천 미래숲 양묘센터, 철원 통일양묘장 등 조성·운영

○ 주요지역에 대한 산림병해충, 산불 등 산림재해 공동 대응

\* 산림병해충 공동조사 및 방제, DMZ 소화전 등 산불장비·협력체계 구축

○ 북한 산림황폐화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산림정보 DB 구축

\* 사방, 조림, 혼농임업 적지 분석 및 복구유형, 방법 등 세부 기준 마련

### □ (협력체계) 유관기관 협력 체계 및 국제기구·NGO 등 연계 강화

○ 식량, 에너지 등과 연계한 산림복구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증진

\* 에너지와 식량을 연계한 패키지 복구를 위한 산업부, 농식품부 협조체계 구축

○ 남북산림협력 지원기반 마련 및 이행을 위한 민·관 협력 확대

\* 북한산림복구 사업단, 민·관 실무협의회, 통일산림비전 자문회의 등 운영

○ 국제기구를 통한 산림협력 지속 추진 및 신규사업 적극 발굴

\* FAO, AFoCO 등과 교육 및 협력사업 발굴을 통한 북한산림복구 역량 강화

○ 국제학술대회와 연계한 남북한 산림과학자 간 교류 추진

\* 남북 산림 용어사전 공동발간 추진('15년 북한 전문가 초청 학술대회시 합의)

## 6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산림행정 혁신

### 1 산림일자리 창출 지원체계 강화

#### □ 일자리 중심 정책으로 정책부서와 일자리 현장과의 거리 축소

- 각 부서에서 발굴된 일자리 사업이 정상 추진되도록 협업 체계 구축  
\* 정책부서-일자리부서-중간지원조직-현장으로 이어지는 정책 이행 체계

#### □ 유관기관 협력 강화 및 산림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내외 공감대 형성

- 관계부처 합동 사회서비스 2단계사업에 산림분야 확대 반영 추진  
\* 숲길체험지도사, 정원전문가, 산림레포츠지도사 등 서비스 분야 일자리
- 산림일자리위원회를 통한 민·관협력 체계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 
\* 사회적경제, 산림전문가, 학계, 시민단체, 언론 등으로 구성, 정기적 포럼 개최

### 2 지우-잡!(불필요한 일 버리기) 추진

#### □ 불필요한 업무나 관행을 발굴·개선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

- 중복, 불필요한 업무를 찾아 축소하고 창의적인 개선방안 마련  
\* 정책기능과 무관한 관행적 업무 통폐합, 업무프로세스 재설계, 간편보고
- 권위주의적 회의 행사 등 의전관행 축소 및 회의 문화 개선  
- 회의는 간결하게 하고, 토론은 대등하게 개선하여 회의 효율 향상  
\* 산림청 의전, 회의 Ground Rule 개정안 수립 및 보급

### 3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체계 혁신

#### □ 교육·훈련·실용연구 기능의 통합 및 인력양성 체계 구축

- '산림교육·훈련 TF'를 구성하여 산림분야 통합 인력양성체계(안) 마련  
\* 공무원, 임업인, 산림기술자 등 수준별 인력양성 체계의 시너지효과 창출
- 사람중심 산림자원 순환경제 구현을 위한 전문인력의 평생교육 강화



## 4

### 조직 내외부의 소통 강화

-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을 확대하여 유연한 조직문화 정착
  - 협업 업무 처리시 인센티브 부여 등 서로 돕는 사무실 문화 유도
  - 산림청 및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정례화 하고 다양한 교류 확산
    - \* 유관 기관장회의 정례화 및 기관간 연합 체육대회 및 동호회 활동 추진
- 상향식 산림정책 의사결정 체계 구축을 위한 거버넌스 활성화
  - 지역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국·공·사유림의 통합지역산림계획 수립
    - \* 국유림 비율이 50% 이상인 8개 시·군(인제, 양구, 강릉, 평창 등) 대상
  - 수목원, 산림치유원 등 대형시설물 조성시 설계부터 지역 참여 확대
    - \* 운영주체(수목원관리원, 산림복지진흥원)를 중심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

## 5

### R&D 성과의 실효성 제고

- 연구과제 기획 단계부터 성과 확산 단계까지 전과정 혁신
  - 기초·응용연구의 우수성과를 개발연구로 추진하는 이어달리기 제도 도입 및 과제별 성과 활용 계획 수립 등 기획기능을 강화
    - \* 정책부서에서 직접 필요한 과제를 기획하여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
  - 연구과제 관리·평가지 정책부서 및 연구성과 활용그룹과의 매칭을 확대하여 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추적 평가를 통해 활용도 제고
- 연구 성과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공유플랫폼 구축
  - R&D 성과 및 정보에 대한 공개 및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
    - \* 본청·국립산림과학원·국립수목원·한국임업진흥원 연구정보 통합관리
  - 연구 수행자료, 연구결과의 홈페이지 탑재 및 대국민 공개
    - \* (전문가) 연구 원시자료, 결과 등 / (대국민) 연구결과를 알기 쉽게 가공한 자료

## ① 산불 방지 대책

### □ 개요 및 현황

- '18년 초 부터 건조한 날씨로 산불피해 증가 및 봄철 산불위험도 상승
  - 금년도(1.8기준) 산불건수 10건, 피해면적 50.6ha(평균 5건, 5.2ha)
- 올림픽이라는 국가적 행사에 대비하여 산불예방·대응 강화 필요
  - 산림관리를 통한 산불 예방부터 진화, 복구까지 종합적 대책 추진

### □ 쟁점

- 제한된 인력·예산으로도 성공적으로 산불을 관리해왔으나, 산불이 대형화, 상시화 되고 있어 헬기 등 진화자원의 보강 필요
  - 동시다발, 대형·재난성 산불 대응에 필요한 공중진화 역량 부족
    - \* 대형산불진화 가능헬기(62대) : 산림청 33, 임차헬기 15, 군 8, 소방 6
- 진화인력의 전문성 부족 및 처우가 열악하고, 가해자 처벌이 미흡
  - 공무원·군인 등 비전문 인력이 투입되어 효율성 저하 및 사고 위험 상존
  -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낮아('17년 42%) 가해자 검거·처벌 강화 필요

### 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(총력대응) 올림픽 기간 중 종합대응을 통해 산불을 철저히 방지
  - 동계올림픽 대비 대응강화(권역헬기 12대, 감시·진화인력 502명 등)
    - \* 동계올림픽벨트(평창, 강릉 등 5개 시·군) 85천ha 보호강화(헬기 1대 평창 배치)
  - 산림재해 종합상황실을 통한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 실시
    - \*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: (현재) 09:00~21:00, 1교대 → (개선) 24시간, 3교대

- (헬기확충) 재난성·대형산불에 대비한 헬기 확충 및 안전성 제고
  - 강풍에서도 산불진화가 가능한 대형급 진화헬기 단계적으로 확충
    - \* 산불진화헬기 확보 : (현재) 45 → ('18) 47 → ('25) 60대(대형급 47대)
  - 지자체 임차헬기 조달계약 조기추진 및 계약요건 강화 등 안전 강화
- (인력보강) 산불대응 인력의 전문성 강화 및 교육·훈련 인프라 구축
  - 광역단위 산불대응 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여 산불피해 최소화
    - \* 대응여건에 따라 지방청, 관리소에 특수진화대(330명)·공중진화대(73명) 분산 배치·운영
  - 특수진화대의 전문성 교육 강화를 위한 지방청별 산불훈련장 개설
- (산불예방) 산불예보·감시 시스템 고도화 및 산불 대응 산림관리
  - 기상·지형 등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으로 산불위험예보시스템 정확도 향상
    - \* 예보 알릴기능 강화 및 정확도 향상(현재 80%대 → 목표 90%)
  - 밀착형 CCTV 확충 및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산불감시망 구축
  - 가해자 검거율 및 대국민 경각심 제고를 위한 신고포상금제도 활성화
- (협업강화)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한 기관 간 협업강화
  - 대형산불 취약지역 대응을 위해 동해안산불방지센터(강원·경북) 설치
  - 소각산불 차단을 위한 인화물질 사전제거 및 소각행위 단속 공조(농업·환경)
  - 행정안전부-산림청-소방청 간 산불재난 정책협의체 운영(연 2회)



## ② 소나무재선충병 방제

### □ 개요 및 현황

- 범정부적 방제 노력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감소 추세로 전환
  - '17.4 기준 109개 시·군·구에서 약 99만본의 피해고사목 발생
  - \* 피해목 발생추이 : ('14.4) 218 → ('15.4) 174 → ('16.4) 137 → ('17.4) 99만본

#### < 시기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방법 >

- 9월~이듬해 4월 : 매개충이 활동을 멈추는 시기로 피해고사목 제거
- 5월~8월 : 매개충이 우화하여 활동하는 시기로 약제살포 등 매개충 방제

### □ 쟁점

- 현재까지 근본적인 치료법이 없어 철저한 예찰과 방제만이 대응책
  - 일부 지자체의 방제소홀, 감염목 무단이동 등에 의한 발생지역 확산
  - \* 발생 시·군·구(개) : ('15.4) 79 → ('16.4) 98 → ('17.4) 109 → (현재) 115
- 이상기온 등 기후적 요인으로 방심하면 다시 급증할 가능성 상존
  -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, 장기적인 R&D 필요

### □ 대응 및 향후 조치계획

- (방제목표) '18년 4월까지 예상 피해고사목 60만본 전량 방제
  - \* 피해본수 감축 목표(만본) : ('17) 99 → ('19) 30 → ('21) 7
- (방제강화) 현장 중심의 관리 강화 및 선제적 대응시스템 구축·운영
  - 현장관리·감독 인력을 보강, 이중 감시체계 구축하여 재발생 최소화
  - 드론 등 활용한 상시 예찰시스템 구축 및 피해가 심한 지자체 지원 강화
- (장기계획) 시·군별 체계적 관리로 소나무재선충병 청정지역 회복
  -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유도 및 친환경 방제기술 연구개발 추진
  - \* 청정지역 전환 지방자치단체에 포상수여 등 인센티브 부여

---

## V. 공통과제 추진계획

---



## V. 공통과제 추진계획

### 1

### 소득주도 성장, 혁신성장 정책

- (일자리) 산림분야 6만개(~'22까지)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 이행
  - 산림재해·복지 등 공공부문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(41천개)
    - 산림재해 대응, 목재제품 관리 등 국민안전 분야 공공인력 확충
    -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고,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
  - 민간중심의 지역 특화자원의 산업화와 산림복지전문업 육성(12천개)
    - 목재, 임산물, 석재 등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특화 클러스터 육성
    - 산림복지전문업 육성, 나무의사 자격제도 도입 등 청년일자리 창출
  -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주체를 활성화시켜 일자리의 다변화(7천개)
    - 국유림과 지역사회가 상생·협력하는 사회적경제 모델 마련
    - 전문성과 현장 밀착지원이 가능한 산림형 중간지원조직 신설
- (산촌) 지역의 혁신성장 동력으로 산촌거점권역 30개소 육성(~'22까지)
  - 산촌거점권역·산촌특구 등 신규제도 운영을 위한 법령정비
    - 미래지향적인 산촌 모습을 반영하여 산촌의 정의 개정
      - \* 개정안마련(1월), 관계부처 협의·입법예고·법제처심사(3~8월), 국회제출(10월)
  - 특화산림자원, 지역역량 등을 고려하여 산촌거점권역 5개소 선정
    - \* 야생화, 목재 및 특산 임산물 등 특화자원 발굴 및 상품화 지원
  - 중앙-지방협의체를 통한 지역주도의 산촌특구 사업내용 구체화
    - 지자체, 소속기관, 지역전문가 협의체에서 지역자원 활용사업 구상

### □ (산림복지) 숲을 국민 쉼터로 재창조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

-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구를 확대 ('17: 2,060만명→'18: 2,310만명)
  - 산악자전거 등 산림레포츠 수요를 반영한 특화 자연휴양림 확대
  - 대상별 산림교육·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맞춤형서비스 제공
- 산림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을 확대
  - 소외계층을 위한 산림복지바우처 발급 물량과 수혜 범위를 확대
    - \* 이용권 발급(매) : ('16) 9,100 → ('17) 15,000 → ('18) 25,000

### □ (도시숲) 국민 가까이에 도시숲을 확대하여 삶의 질 개선

-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하여 크고 작은 도시숲 조성 확대 추진
  - 도심내 자투리 공간, 산업 단지주변에 도시숲을 조성하여 환경개선에 기여
  - 미세먼지 저감 및 지진 등 재난대응형 도시숲 조성방안 연구
- 도시숲 트러스트를 활성화하여 국민이 참여하는 도시숲 문화 육성
  - 시민·기업이 함께하는 도시녹화운동 확대 및 거버넌스 활성화 지원
    - \* 전국 35개 도시숲 트러스트의 운영, 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

### □ (정원)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의 웰빙 산업화 촉진

- 코리아 가든쇼, 정원산업디자인전 등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원문화 확산
  - \* 가든쇼(광화문광장, 5월)/ 디자인전(순천, 5월)/ 오픈 가든 어워드(7월 시상)
- 쉽게 설치할 수 있는 '이지가든' 보급으로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
  - \* 이지가든 시스템 및 모듈(20개), 가이드라인(20개) 등 개발



- (올림픽 後 복원) 가리왕산 활강경기장 복원을 둘러싼 갈등 예상
  - (배경) 산림보호구역 해제 후 경기장 조성 및 복원계획 수립 중
    - 산림복원을 전제로 산지전용 협의('14) 및 경기장 조성
    - 경기장의 상업적 활용과 생태적 산림복원 간 이견 발생이 예상
  - (향후계획) 강원도의 복원기본계획 수립 지원 및 심의 추진
    - 강원도가 대회지원위원회에 복원재원 확보건 등을 상정토록 협의
    - 중장기적으로 가리왕산 산림보호구역을 산림복원 연구의 모델로 활용
- (풍력발전)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과 산지훼손 방지라는 가치 충돌
  - (배경) 탈원전, 화석연료 감축 기조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수요 증가
    - 가격이 저렴하고 민원이 적은 산지에 발전소 조성이 확대됨에 따라 환경단체 등에서 산림생태계가 훼손되는 것에 대한 우려 증가
  - (향후계획) 발전시설 조성시 합리적 기준과 민주적 절차를 도입
    - 인허가 및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입지에 따른 합리적 기준 마련
      - \* 관련 법, 입지특성, 최근 10년간 현황 등을 바탕으로 개선방안 연구 추진
    -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사전 합의를 전제로 하는 계획입지제 도입 추진
- (수목장림) 건전한 장묘문화 확산을 위한 수목장림 활성화 추진
  - (배경) 장사시설의 특성상 혐오시설로 오인되어 대상지 갈등 심화
  - (향후계획)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현실성 있는 추진절차와 사업모델 개발 및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·확산

#### □ (산불) 동계올림픽 기간 중 철저한 대형산불 예방으로 국민안심 실현

- 동계올림픽 대비 대응강화(권역헬기 12대, 감시·진화인력 502명 등)
  - \* 동계올림픽벨트(평창, 강릉 등 5개 시·군) 85천ha 보호강화, 헬기 전진배치
- 산불재난 주관기관으로서 신속하고 빈틈없는 상황관리·대응
  - \* 산불상황실 비상근무 : (현재) 09:00~21:00, 1교대 → (개선) 24시간, 3교대
- 강풍에서도 산불진화가 가능한 대형급 진화헬기 단계적으로 확충
  - \* 산불진화헬기 확보 : (현재) 45 → ('18) 47 → ('25) 60대(대형급 47대)
- 광역단위 산불대응 전담팀 운영을 확대하여 산불피해 최소화
  - \* 대응여건에 따라 지방청, 관리소에 특수진화대(330명, 33팀) 분산 배치·운영

#### □ (산사태) 지진, 땅밀림 등에 대비한 종합적 산사태 대응체계 구축

- 산사태주관기관으로서 통합적 산사태 국가재난관리체계 구축 준비
  - \* 산지뿐 아니라 도로, 주택 등 피해구역 포괄 관리를 위한 법령안 마련
- 산사태 취약지역(24천개) 관리 강화 및 산사태 발생 예측력 제고
- 지진해일 대응을 위한 해안사방 및 땅밀림 조사 등 신규사업 추진
  - \* 해안방재림(10ha), 해안침식방지(12km), 산사태예방 사방 추진(사방댐 504개소 등)

#### □ (재선충병)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고사목 전량방제(~4월) 및 확산 방지

- 드론 ICT 활용한 과학적인 피해고사목 예찰·조사 시스템 구축
- 훈증더미 이력관리 철저, 이동단속 강화를 통해 병해충 확산 방지
- 우화기 이전 고품질의 전량 방제 및 피해고사목 재활용 촉진
  - \* 수집 파쇄 비율을 확대(55→58%) 및 수익모델 창출하여 산주소득 보전
- BT기반 친환경 방제약제 등 R&D 성과 개발 및 방제전략 개선

- (업무혁신) 불필요한 일은 버리고, 민주적 소통을 확산하여 업무효율 증진
  - 업무의 선택과 집중으로 불필요한 일을 버리고 핵심성과를 창출
    - 유사한 업무, 관행적 업무 등 통폐합 및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
      - \* 각종 워크숍, 연찬회, 각종 행사 등을 업무별로 통합하여 실효성 있게 추진
    - 권위주의적 행사 등 과도한 의전관행을 국민 눈높이로 전면 전환
  - 대등하게 토론하고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창의력과 유연성 향상
    - 토론시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 발굴
      - \* ex) 회의 중 닉네임 사용, 상대방 말 자르거나 비난 금지 등
    - 산림청 내 부서 및 관계기관 간 업무 내외적 교류 활성화 지원
- (근무감축) 유연근무 활성화 및 초과근무 감축으로 일·가정 양립 실현
  - 대국민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도 활성화
    - 개인별 근무시간 자율설정 및 스마트워크센터 등 원격근무 적극 활용
      - \* 기관별 유연근무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유연근무 실시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
    - 문화가 있는 날 2시간 조기 퇴근을 위한 집단적 유연근무제 시행
  - 불필요한 일 버리기와 초과근무 총량관리를 통한 업무시간 감축
    - 스마트행정을 통한 대기업무 최소화 등 불필요한 일 버리기
- (연가활성화) 눈치 안 보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는 문화 정착
  - 업무의 공백이 생기지 않는 범위에서 적극적인 연가 사용계획 수립
    - 각 부서장·소속기관장 등 간부 공무원부터 연가사용 솔선수범
  -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'여름철 2주 휴가제' 도입 검토

